

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여기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3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6. 18.

발 의 자 : 여기구·유동수·문진석  
서영석·이진(비)·주철현  
김주영·박영순·박 정  
서동용·노웅래·김상희  
정일영·박재호·윤준병  
의원(15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중소기업자단체는 사업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심의회 개최 시까지 대기업에 개점 등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음.

대기업이 정부의 일시정지 권고를 불이행 할 경우, 이행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 5천만원을 부과하고 있음.

그러나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코스트코 등의 대형유통업체가 개점 강행 등 이행명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대기업 등의 일시정지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이행명령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1항 중 “5천만원 이하”를 “1억원 이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.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제43조(과태료) ①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<u>5천만원 이하</u> 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.	제43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<u>1억원 이하</u> ----- -----.
② ~ ⑤ (생   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